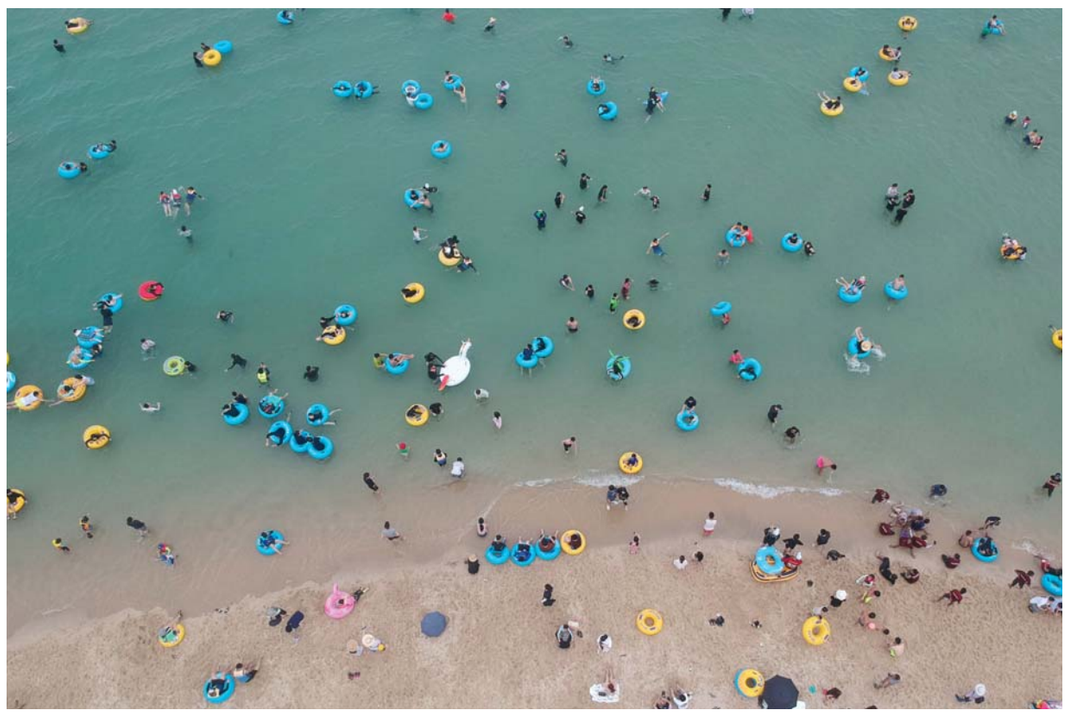
‘눈대중’ 피서객 집계, 부풀리기 의혹…방식 통일해야

[편집자주] 지난 25일 양양군 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다. 해가 갈수록 피서지와 피서문화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실대는 푸른 파도가 있는 동해바다는 여름휴가 때 빼놓을 수 없는 국내 피서 1번지다. 하지만 4년 전부터 피서객이 계속 줄고 있는 등 피서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명암과 성과를 조명해본다.

[해수욕장 폐장④]

동해시 제외 강원 5개 시군
신뢰도 낮은 ‘페르미추정법’ 집계
주요 해수욕장에 빅데이터 도입 검토



경포해수욕장 찾은 피서객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은 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지자체마다 개장기간 방문객수를 산출한다. ‘페르미추정법’으로 집계하는 지자체들은 신뢰도가 낮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집계방식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페르미방식은 해수욕장의 특정 면적에 포함된 인원을 기준으로 전체 면적 인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육안으로 인파 확인이 가능한 낮 시간대에 측정한 특정 면적 인원을 기준으로 밤 시간대까지 방문한 인원을 추정해서 집계한다.

피서객 방문 수만큼 체감하지 못한 지역상인들은 ‘피서객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폐장일이 일주일 늦은 양양군의 경우 지난 18일 해수욕장 누적 피서객 수는 240만명이었지만 25일 기준 352만명으로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피서객 집계를 동일한 조건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실화하기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 도입 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올해부터 휴대전화를 활용한 빅데이터 집계 방식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 매일 오후 강원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피서객수를 보고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집계 결과가 당일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6개 시군 관계자들과 폐장 이후 결과보고를 통해 장단점 분석과 문제점 해결 방안, 피서객 집계방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동해안 6개 시군마다 각 대표해수욕장을 선정하고 빅데이터 방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서객 연령층, 유동인구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총 92곳인데 모든 곳에 빅데이터 방식을 적용하기엔 예산·기술상에 한계가 있다”며 “3년에 걸쳐 통계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면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해시는 지난 2016년부터 추암·망상해수욕장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피서객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밖에 5개 시군에서는 눈대중에 가까운 페르미방식으로 피서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

뉴스1

강원 물놀이사고 줄었지만 사망은 증가

[해수욕장 폐장. 끝]

사고 38건 발생…지난해보다 8건 줄어
사망자 1명 늘어… 폐장 후 사고 잇따라

이번 여름 강원도에서 물놀이 관련 수난 사고가 전년대비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소방본부와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도내 수난 사고는 총 38건으로 이중 18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물놀이 사고 46건에 비해 약 8건이 줄고 사망자는 1명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수영미숙(탈진)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파도휩쓸림 5건, 고립 3건, 다슬기 1건, 음주 1건, 기타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강과 계곡 등에서 21건으로 대부분 발생했으며 이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17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

이중 해수욕장이 폐장한(양양 제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욕장 폐장 후 사고는 2016년 15건(사망 1명), 2017년 15건(사망 2명), 지난해 10건(사망 3명)으로 꾸준히 발생해 오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7분쯤 강릉시 사천면 하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 등 4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19일 오전 9시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지난 17일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해변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당시 인명구조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에 대비해 동해안 내 일부 지자체들은 폐장 이후에도 일주일 정도 수상안전요원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서객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해수욕장 폐장 후 수상안전요원이 대부분 철수했다”며 “이안류와 너울성 파도 등 동해바다의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던 것을 365일 내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첫 피서를 맞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이 문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피서객이 폐장 후 또는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갈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지만 제제 조항도 사라지면서 막무가내 피서객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수욕장 입수 금지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을 허용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폐장 전후 또는 수영금지 해수욕장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혹은 지자체에서 조례 등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뉴스1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